

인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2.

I. 일 반 개 황	1
II. 경 제 동 향	2
III. 정 치 · 사 회 동 향	7
IV. 국 제 신 인 도	10
V. 종 합 의 견	11

국 별 조 사 실

인 도

I. 일반개황

면적	3,287천 Km ²	GDP	11,317억 달러(2007년)
인구	1,110.00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1,020달러(2007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Rupee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41.30Rp(2007년)

-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및 벵골만, 서쪽으로 파키스탄과 아라비아해, 북쪽으로 중국, 네팔 및 부탄, 남쪽으로 인도양과 접해 있는 인구 11억의 국가임.
-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로서 독립 이후 자립지향적 수입대체형 경제체제를 유지해왔으나, 1991년부터 자유화 정책을 채택,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을 추진해오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제성장률	8.4	8.3	9.2	9.4	7.9
재정수지/GDP	-4.6	-4.0	-4.1	-3.5	-3.4
소비자물가상승률	3.8	3.8	4.3	6.2	6.5

자료: IFS, EIU

□ 성장세 다소 둔화

- 최근 4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견실한 성장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연평균 8.8%의 고도의 성장세를 지속하여 2006년에는 9.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유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7.9%, 2008년에는 7.7%로 경제성장이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유가, 국내 이자율 및 루피화 환율 상승, 세계 신용위기 등으로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 보다 빠른 수입 증가세로 인한 순수출 감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만성적인 재정적자

- 전체 인구의 0.2% 정도만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열악한 조세제도로 인한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편이나, 지속적인 정부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경제성장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4%를 기록하며 목표(GDP의 3.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문 임금 인상, 농촌지역 복지정책, 공적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가 상승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2008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목표(GDP의 3%) 보다 높은 GDP의 3.3%를 기록하며 완만한 속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급등한 물가상승률 다소 안정

- 유가 상승, 식품가격 및 임금 인상, 가계부문의 소비 증가 등으로 2006년 이후 급등한 물가상승률이 2007년초 7%를 넘어섰으나, 수입관세 및 연료 소비세 축소, 루피화 환율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다소 감소함에 따라, 20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유가상승 및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의 긴축 정책,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감소하여 물가상승률이 2008년 6.1%, 2009년 5.6%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 경제구조 및 정책

□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한 사회 불안요인 상존

-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으나 사회 전반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 민족, 언어 등이 공존하고 있어 사회구조가 복잡함.
-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경제발전 및 소득격차가 매우 커서 지역간 갈등 및 빈곤퇴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7%대의 높은 실업률도 인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임.
- 복잡한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인도 근로자들은 주어진 일 이외에는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이 낮은 상태임.

□ 열악한 사회 인프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전력,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가 열악하여 인도의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정부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유화 및 개방정책 등을 내놓고 있음.

- 전력의 경우, 전력부족률이 총 수요의 약 6% 수준으로 최고 12%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나, 정부가 결정하는 전력요금 체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 전력회사들이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여 설비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음.

□ 관료주의 만연으로 행정 소요시간 과다

- 인도는 심각한 관료주의와 복잡한 행정업무로 행정 효율성이 낮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힘이 커서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사항이라도 지방정부의 반대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사업 개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을 하면서도 세무, 노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10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내수시장

- 인도는 1991년 외국인투자 자유화, 무역장벽의 완화,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연평균 5~8% 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최근 4년간 경제성장률은 8.8%를 상회하고 있으며, 교역규모도 2002년 1,058억 달러에서 2006년 2,903억 달러로 최근 4년간 약 174% 성장하였음.
-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1억 인구의 실질 구매력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고가의 가전제품 및 자동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향후 거대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세계적인 수준의 IT 산업 보유

- 인도의 IT 산업은 저임의 풍부한 영어구사 노동력, 정부의 적극적인 IT 산업 지원 정책, 미국과 12시간의 시차 등의 강점으로 여전히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IT 산업의 수출증대로 인한 서비스부문의 성장이 인도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신집권연합(UPA)의 경제정책

- 국민의회당(Indian National Congress; INC)을 중심으로 한 신집권연합(UPA)과 UPA에 지지의사를 밝힌 좌익정당들은 2004년 5월 27일 연립정권 내의 경제정책으로 공동경제계획(Common Minimum Program; CMP)을 수립 발표함.
- CMP는 사회적 화합의 증진, 사회 각 계층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경제성장 지속, 농민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여성에 대한 정치 경제적 권한 강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제공, 과학자, 기업가 등 사회 전문가들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6대 원칙하에 작성되었음.
- CMP의 주요 내용은 집권기간 중 7~8%의 GDP 성장 지속, 2009년까지 재정적자 해소, 부가가치세제의 조속한 도입,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 세금에 대한 가산세 도입, 노동법 개정 등임.

□ 재정정책

- UPA 정부는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세제 개혁을 통한 세원 확대와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현재 인도 전체 인구의 0.2%에 불과한 2백만 명만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재정적자의 단기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개혁정책의 추진이 지연되고, 국내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의 단기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선심성 선거공약에 따른 과도한 재정지출도 문제점으로 상존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 상 수 지	8,773	780	-7,835	-9,415	-16,743
경상수지/GDP	1.5	0.1	-1.0	-1.0	-1.5
상 품 수 지	-7,188	-17,600	-32,526	-57,243	-76,133
수 출	60,893	77,939	102,176	123,617	145,556
수 입	68,081	95,539	134,702	180,860	221,689
외 환 보 유 액	98,938	126,593	131,924	170,738	236,524
총 외 채 잔 액	112,855	124,376	123,128	135,097	147,807
총외채잔액/GDP	19.0	18.0	15.2	14.6	13.1
D.S.R.	18.8	13.7	13.0	7.8	8.2

자료: IFS,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인도의 상품수지는 상품수입의 약 1/3을 차지하는 석유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고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 유가 상승, 점진적 무역자유화 등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 상품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으며, 2007년 및 2008년 각각 GDP 대비 1.5% 및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적자는 2009년 경상이전 및 소프트웨어 수출 등 서비스수출 증가로 적자폭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사업승인 절차, 업무처리 지연, 중앙 및 주정부 재정악화에 따른 보증의 어려움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나 통신을 비롯한 인프라 부문 및 IT 산업에 대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3년 2.2억불을 기록한 외국인직접투자가 2006년에는 19억불로 급증하여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포트폴리오투자를 앞서게 되었음.

- 신집권연합(United Progressive Alliance; UPA) 정부가 델리 및 뭄바이 공항의 민영화 등을 통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소매부문 개방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공산좌파를 중심으로 한 야당의 강한 반발로 정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외채상환능력

- 총외채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총외채잔액/GDP 비율은 10%대의 안정적 수준으로 점차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총외채잔액/GDP : 15.22%(2005년) ⇒ 14.59%(2006년) ⇒ 13.10%(2007년)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동향

□ UPA 정부,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

- 2004년 5월 인도 총선에서 소니아 간디가 이끄는 국민의회당(INC)이 최대 의석을 차지하여 8년 만에 재집권을 하게 되었으며, INC가 주도하는 연합 정부인 신집권연합(UPA)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인도공산당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CPI) 등 공산좌파 정당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음.
- UPA 정부에서 총리로 지명된 싱(Manmohan Singh) 총리는 1991년 인도 경제개혁정책의 주요 입안자로서 신정부의 정치, 경제, 외교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UPA의 집권기반이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빈민층임을 감안하여 UPA 정부의 경제정책이 분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좌파 정당들의 UPA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에 따른 조기총선 가능성

- 소수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좌파 정당들은 UPA 정부에 대한 지지를 조건으로 의석수에 비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 완화 및 민영화 등 주요 개혁정책과 외교정책을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현 연합정부의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2007년 12월 중순 좌파 정당들이 UPA에게 미국과의 핵 협력 협정 취소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UPA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 통보함에 따라, UPA가 총선 예정일인 2009년 5월까지 좌파 정당들의 지지 없이 정권을 유지하는 대신 늦어도 2008년 내에 조기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이는 UPA가 2008년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및 경제발전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선 예정일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조기총선을 하는 것이 재집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과반수 의석 정당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 현 정치상황에서 전국적 정당인 국민의회당(INC),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인도공산당(CPI) 중 어느 당도 단독으로 의회에서 과반석을 차지할 수 없으므로 지역 또는 카스트에 기반을 둔 정당들과 연정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의 연합세력에 의지할 수 없으므로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 앞으로 넘겨주었고, 이로 인해 1990년대 초반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가 완화된 산업, 금융, 무역 등에 대하여 각 주들의 경쟁에 의해 지역간 경제개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여타 주의회 선거 및 2009년 총선에서 어느 당도 과반수 의석 확보가 어려워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하므로 향후 연정 구성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정치가 경제발전의 걸림들

- 높은 민주주의식, 군부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 등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관료의 부정부패, 다수 정당 난립에 따른 수시 정권교체 등 정치가 경제발전의 걸림들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연합정당이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 UPA 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관료주의적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제자유화에 대한 좌파 정당 등의 강한 반대로 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음.

2. 사회 동향 및 국제관계

□ 사회불안 요인 상존

- 높은 인구 증가율, 빈부 격차, 종교, 계급, 민족간 대립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IT 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개인간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파키스탄과 분쟁 가능성 상존

-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 문제 및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 문제로 3차례의 전쟁을 포함하여 잦은 분쟁을 겪어 왔음.
- 2001년 12월 이슬람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인도 의사당 공격으로 촉발된 양국간 긴장 고조로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으나, 2003년 12월 양국간 평화협상이 재개되어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평화적 교류가 추진되어 왔고, 2007년 2월 양국은 우발적 핵전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음.

- 그러나 2008년 1월 부토 전 총리의 암살과 2월 실시 예정인 총선 등으로 파키스탄의 정치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무샤라프 대통령의 입지도 점점 약화되고 있어 향후 파키스탄의 정국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민수용 핵시설에 대한 핵 협력 협정 체결

-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핵 에너지와 원자로 부품 수입을 금지당해 왔으나, 2006년 3월 2일 인도 싱 총리와 미국 부시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이후, 인도의 민수용 핵시설에 대한 양국간 핵 협력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인도가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됨.
- 핵 협력 협정의 주요 내용은 인도가 2014년까지 통합형인 인도내 핵시설을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구분하여 총 22개 원자로 중 민수용 원자로 14개에 대해 국제사찰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이 인도에 대한 핵 동결을 해제하고 핵연료와 기술을 공급한다는 것임.
- 이는 중국의 패권을 의식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현재 인도의 좌파 정당들의 반대로 협정 체결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외채무에 대한 동국의 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 외채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외채 비중이 총 외채의 7% 수준 이고 D.S.R.도 양호해 외채상환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국제시장평가

- Moody's : Ba2(2002. 11) → Ba1(2003. 2) → Baa3(2004. 1)
- S&P : BB(1998. 10) → BB+(2005. 2) → BBB-(2007. 1)

- Fitch : BB(2001. 11) → BB+(2004. 1) → BBB-(2006. 8)
- Euromoney : 60/185(2005. 3) → 58/185(2006. 3) → 59/185(2007. 3)
- I.I. : 57/173(2005. 3) → 58/173(2006. 3) → 58/173(2007. 3)
- I.C.R.G. : 69/140(2005. 5) → 71/140(2006. 6) → 80/140(2007. 5)
- OECD : 3등급(2005. 4) → 3등급(2006. 4) → 3등급(2007. 3)

□ Moody's, S&P, Fitch사 등 주요 3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장기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받았음.

3. 주요 ECA 인수 태도

- 미국 수은 : 전액 인수가능
- 영국 ECGD : 전액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전액 인수가능

V. 종합 의견

- 2007년에는 유가 상승, 금리 인상, 루피화 환율 상승, 세계 신용위기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7.9%를 기록하면서 최근 4년간의 8~9%대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음.
- 신집권연합(UPA)은 경제개혁 지속 추진 및 파키스탄과의 평화정책 천명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도 크게 개선시켰음. 그러나 현 정권이 빈민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제정책이 분배에 우선을 두고 있으며, 개혁정책의 추진이 좌파 정당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음.
- 개방정책 실시 이후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다수 정당 난립에 따른 정치불안, 인접국인 파키스탄과의 분쟁 재발 가능성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음.

책임조사역 백 승 주 (☎3779-6648)

E-mail : sjpaik@koreaexim.go.kr